

통합과 선린을 위한 21세기 한반도 민족주의의 모색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요약 —

이 글은 남북한의 공존 또는 통합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와 주변국의 평화로운 관계 설정을 위해 한반도 민족주의가 어떤 내용을 가져야 하는가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역사적으로 전개되고 형성된 한반도 민족주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한반도 민족주의는 첫째, 저항 민족주의로 등장했지만 그 이후에도 온전한 민족 국가를 성립시키지 못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내적인 단결과 외적인 적대의식을 띠고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배타적이고 국수주의적인 기초를 갖고 있다. 실제로 남북한 모두 강대국에 대한 의존이 강하게 존재하면서도 이런 기초를 띠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 민족주의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민족주의 담론이 남북한 각각의 권위주의적인 독재 정치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셋째로는 남북한은 각각 상대방에 대해 자신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내세우고 경쟁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한반도 민족주의는 긍정적인 측면인 우리 민족의 종족적 동질성이나 오래된 민족 국가적 전통을 강조하는 데 머물지 않고, 민족주의의 보편적인 측면, 즉 민주주의와 결합을 통해 민족통합의 과제를 완수하고 동시에 주변국과의 평화로운 선린 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원천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민족통합의 과제 역시 단일 국가로의

통일에 집착하지 말고 공존과 통합을 변증법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북아 국가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통합과정이 필요하다. 요컨대 한반도 민족주의가 추구해야 할 것은 통합과 선린을 추구하는 열린 민족주의이고, 그 핵심은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되어야 한다.

I. 서론

2006년 10월 9일은 한반도 역사에서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 날이다. 바로 이날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든 않든 간에,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 비쳐지기를 원하고 있음에 틀림없다.¹⁾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과연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 미국인가, 일본인가, 남한인가. 만일 남한이라면 우리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며, 그러한 사실로부터 분단 시기 아무리 강고하게 구축되었다고 하더라도 남북한의 체제나 이념, 안보적 이해관계의 차이를 언젠가는 사상(捨象)시킬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동시에 민족을 기반으로 해서 언젠가 한반도에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이 가능하며, 또한 당위론적으로도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라는 신념에 대해서도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민족은,

1) 2007년 1월 1일 발표된 북한의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3개 신문의 신년 공동사설에는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미 10월 9일 핵실험 직후 북한 당국이 발표한 성명문에 “과학연구부문에서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천명했지만, “핵 억제력을 가지게” 됐다는 표현은 신년공동사설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적어도 같은 핏줄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가진 집단으로서 상호파멸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가 성립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날 목도하고 있는 현상은 분명히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라는 명제에 반한다.²⁾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오래 동안 주장해 왔듯이 자신의 핵 보유는 결국 북한을 ‘압살’ 하려고 ‘책동’ 해온 미국에 대한 안보적 억지력을 갖기 위한 것이라면 오늘날의 한반도 민족주의는 과연 어떤 특성을 갖는 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과 나아가서 한반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적인 질문은 차치하고라도 북한이 추구해 왔던 반제 자주 노선의 논리적 귀결이라면 여전히 한반도 민족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초기인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 외세 침탈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민족주의적 특징을 탈각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보인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의 관심은 한반도 민족주의의 현재적 좌표 설정과 미래의 비전에 대해 과연 깊은 성찰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민족주의는 아(我)와 비아(非我) 간의 구분에 기초하며, 아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위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다면, 한반도 민족주의 역시 이러한 시도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남북한의 분단과 더불어 한반도 민족주의는 내적 분열을 겪었고, 그 분열은 민족 내부의 통합을 저해하였다. 심지어 각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 내부에도 소분열을 조장하였고, 남한의 경우 그러한 소분열은 지금까지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 지역주의로 재생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 핵무기와 민족주의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국가주의의 소산이며, 국가를 단위로 하는 정치공동체의 안보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다.

냉전시대 초기 갈라진 남한과 북한이 각각 미국과 소련·중국과의 냉전적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고, 탈냉전이 도래한 지금에도 여전히 그 유산을 품어 안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민족주의는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요한 통합과 선린의 정신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분단체제 하에서 ‘한반도 민족주의’(Korean nationalism)가 타당하며 성립 가능하고, 또한 유용한 개념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박호성은, 민족주의는 해당 민족이 처한 역사적 상황과 실천적 목표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해당 민족의 역사적·실천적 과제에 부합하는 당위론적 민족주의의 개념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때 민족이 아우르고 있는 대내적이고 대외적인 요소를 총체적으로 종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호성의 한반도 민족주의는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서, 또한 당위로서, 민족통일을 위한 이념으로 제시된 것이다.³⁾ 이 글에서 한반도 민족주의는 이를 포함하면서도 당위론적 개념 외에도 남한과 북한에서의 민족주의의 전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형성되고 변화되는 궤적을 보여주는 분석적 개념으로 상정된다. 미래의 한반도를 위한 민족주의의 내용을 투사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분석도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⁴⁾

3) 박호성,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한반도 민족주의’를 위하여』(서울: 당대, 1997), p. 150.

4) 그 명칭을 무엇으로 쓰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가령 최장집과 같이 ‘한국민족주의’라고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렇게 사용했을 때 남한 민족주의와의 구분에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최장집의 글은 “한국민족주의의 특성, “한국민족주의의 조건과 전망」(서울: 나남출판, 1996)이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민족주의의 상이한 궤적을 하나의 범주에 놓고 한반도 민족주의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남북한 관계와 민족주의의 연계에 천착할 수 있으며, 과거와 미래를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반도 민족주의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단일 민족 국가적 전통과 문화에 기초해 있지만, 정교하지 못하고, 정서적이며, 혹은 한반도로 민족의 영역을 한정시킨 역사에 체념하여 만들어진 소극적이고 회고적(retrospective), 결과론적 특성을 갖는다. 또한 식민지와 분단, 전쟁을 경험하면서 남과 북의 이질성을 강조하기보다 남과 북의 동질성을 강조하며,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원심적 시도에 대한 일정한 반발을 담고 있는 구심적 구상을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특성도 갖는다. 요컨대 한반도 민족주의는 현재시점까지 민족국가를 온전하게 내오지 못함으로써 불완전하며, 향후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미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민족주의 자체가 시공간적으로 보편성을 띠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며, 따라서 '접두사 민족주의'로 보다 더 잘 규정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민족주의 역시 독특한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⁵⁾

한반도 민족주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모색해야 할 것은 남과 북의 공존 또는 통합의 문제에 있어서 민족주의의 내용과 특성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과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 즉 대외적인 문제에 대한 비전의 확립이다. 이 글은 바로 이를 성찰하기 위한 하나의 시론이다. 이 글이 추구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민족주의의

5) 위의 책, p. 174.

특징은 무엇인가. 남과 북에서 각각 전개된 민족주의는 어떤 공통점을 갖는가. 한반도 민족주의가 남과 북의 평화공존, 또는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갖춰야 하는가. 또한 역사적으로 매우 불쾌한 기억을 갖고 있는 동북아의 주변국들과 한반도가 공존과 평화, 번영을 함께 하기 위한 민족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따라서 이 글은 한반도 민족주의의 궤적을 추적해 보고, 이를 통해 남북한 전체를 아우르는 민족주의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포착하여 한반도 공존 또는 통합에 기여하면서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반도 민족주의의 내용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남북한 관계의 전개와 한반도 민족주의의 특성

우리 민족에게 ‘민족’은 외세의 침탈에 저항하는 수동적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외세의 침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는 구분되는 ‘우리’의 개념이 탄생하였고, 그 개념에 입각해서 민족에 대한 관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민족주의는 열강의 민족주의적 표현인 제국주의적 침탈에 대한 반사적(反射的)인 성격을 갖는다. 최장집의 말처럼 ‘민족주의에 반(反)하는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⁶⁾ 따라서 이러한 민족주의는 유럽에서 근대 세계의 출현과 더불어 등장한 중앙집권적 근대 국가와 자본주의의 발흥,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정치적 가공물과는 다르다. 박호성은 민족주의 이론에 대한

6) 위의 책, p. 174.

검토를 통해 국가민족, 문화민족, 저항민족의 셋으로 구분하여, 우리의 경우는 세 번째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리고 각각의 민족 개념은 각각 민주주의의 건설, 민족통일의 달성, 그리고 민족해방의 쟁취라는 과제를 제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역시 우리의 경우는 문화민족과 저항민족의 개념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⁷⁾ 분명히 한반도에서의 민족주의는 외세의 침탈이라는 외부적 자극에 의해 비로소 등장했지만, 오래 동안의 단일 민족 국가적 전통에 의해 민족주의가 더욱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은 서구에서처럼 ‘상상된 공동체’ (imagined community)이거나 ‘가공적 초가족’ (fictive super-family)과 같은 인위적인 기제에 의해서 끊임없이, 정교하게 추구되는 민족적 단위와 정치적 단위를 일치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일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적인 국가의 성립과는 상관없이 산발적이고, 밑으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민족주의가 불거지게 된 까닭이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한반도에서는, 서구에서처럼 근대 국가가 민족주의를 창안하여 실천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촉진시켰던 것과는 달리 민족주의가 오히려 근대적인 민족국가의 건설을 요구하게 되었다.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저항은 곧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이었고, 독립은 새로운 우리 민족만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독립은 곧 그 이전, 즉 왕조 국가에서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근대적인 국가건설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미지의 세계인 근대 국가건설을 둘러싼 다양한 길에 대한 모색은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그만큼 이 모색을 둘러싼 쟁투 역시 불가피하였다.

7) 박호성, 앞의 책(1997) 참조할 것.

1919년에 발생한 3·1운동 전후에 극동러시아 지역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공산주의 운동단체인 이동휘의 한족공산당과 러시아화된 한인들의 이르쿠츠크(Irkutsk) 공산당간의 불행한 파쟁의 역사는 1921년 자유시 사변을 통해 표출되었다. 비록 볼셰비키의 개입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민족간의 유혈투쟁이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다.⁸⁾ 이들 간의 충돌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이들이 다양한 노선상의 차이, 예컨대 러시아화된 한인인지 혹은 이주한 한인인지, 볼셰비키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새롭게 건설될 독립국가의 모델로 소련의 정부형태를 상정하는지 하지 않는지 등도 있지만, 한국 공산주의운동을 한반도를 포함해서 동북아시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선구자인 이동휘에 대해 개인적으로 지지하는지 하지 않는지도 작용했다는 것이다.⁹⁾ 이러한 독립운동의 지도자 개개인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현상은 한반도 민족주의의 역사에서 너무나 자주 목격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한반도 민족주의의 분열의 역사의 서막이었다.

그 이후 국내에서 전개된 공산주의운동의 역사 역시 분열과 종파의 역사였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파벌이 만들어졌고, 이들 간의 종잡을 수 없는 합종연횡과 가지치기가, 1928년에 완벽하게 와해될 때까지 ‘조선공산당’ 운동을 수놓았다. 1928년 12월 코민테른은 한국 공산주의운동의 파벌성을 비판하면서 “다년간의 파쟁으로 인해 운동의 발달은 극도로 구속, 억압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931년에 발표된 코민테른 집행위원 쿠시넨(Otto Kuusinen)의 논설은 더욱 더 신

8) 이 사건의 전개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스칼라피노, 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서울: 돌베개, 1986), 1장을 참조할 것.

9) 위의 책, pp. 76-77.

랄하였다. 이른바 쿠시넨은 한국 공산주의운동의 각 파, 각 동지 간에는 여러 가지 경향이 다분히 있었고 따라서 어느 경향이 의미를 갖느냐는 것은 결국 구별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때로는 동일한 동지 간에 무지개의 여러 빛깔과도 같은 모든 경향을 볼 수 있었다고도 했다.¹⁰⁾

민족주의 우파세력들 내부의 분열과 갈등도 그리 다를 바 없었다.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시베리아, 만주, 미국 그리고 조선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참여했다. 도쿄의 조선인 단체로부터 일단의 학생들도 파견되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초기부터 갈등이 발화했다. 발화의 계기는 임정의 대통령 이승만과 그의 각료들이 제 각각 출신성분이나 지역이 크게 달랐다는 것도 있지만, 발족 당시부터 러시아 또는 미국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순수하게 조선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균열이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은 1925년의 총회에서 그에 대한 탄핵으로까지 발전했다. 지도자의 선출이나 지도권의 유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1921년 이후 상해의 독립운동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¹¹⁾

1938년에는 우리 독립운동에 있어서 커다란 수치를 안겨준 사건이 벌어졌다. 그 해 5월 김구, 현익철, 유동열, 이청천 등 우익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이운환이라는 한국 청년의 흉탄을 맞아 현익철은 사망하고, 김구도 생사의 기로를 헤매어야만 했다. 당시 임정을 지지했던 우익 단체는 김구 계열과 합작했다가 분열한 이청천계의 혁명당, 조소앙계의 독립당, 그리고 김구의 국민당 등이었는데 김구는 이운환을

10) 위의 책, p. 163.

11) 그레고리 헨더슨, 『소용돌이의 한국정치』(서울: 한올아카데미, 2000), p. 153-154.

사주한 사람들이 한국독립당원들이라고 『백범일지』에서 적고 있다.¹²⁾ 만주에서의 우익 항일단체들인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간의 갈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 간의 통합 노력도 있었지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¹³⁾

물론 공산주의운동과 민족주의 우파간의 갈등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신간회 운동과 같이 민족협동전선이 1920년대 후반 수립되기도 했지만 1931년 공산주의자들의 해소 방침에 따라 와해되었다. 여기서 식민지시대 우리 민족주의운동의 분열상을 열거하여 그 심각성의 정도나 폐해를 장황하게 서술할 필요는 없겠다. 이러한 분열과 갈등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분열적 정치문화에 기초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설명하는 순간 동어반복이 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조선시대의 사색당파에서 보듯이 원래부터 분열적이다! 이것이 타당한 설명이 될 수는 없다. 1927년 중국의 국공합작 실패에 따른 코민테른의 좌경노선으로의 전환이 공산주의운동의 당파성을 부추기거나 부각시켰다든가, 또는 일본의 정교하고 세심한 탄압정책이 공산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간의, 그리고 민족주의 세력 내부의 갈등을 부추겼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약소국이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입김에 의해, 또는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강대국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강대국들의 영향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에 따라 다양한 정치적, 투쟁적 입장이 나오게 됐다는 것도 타당성이 있겠다.

그러나 식민지 하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민족주의는 새로운 국가건설

12)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서울: 일조각, 2006), pp. 74-75.

13) 이정식, 김학준, 김용호, 『혁명가들의 항일 회상』(서울: 민음사, 2005), p. 498에서 김좌진을 도왔던 무정부주의자 이강훈의 증언을 발견할 수 있다.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 하에서 가상의 중앙권력을 둘러싼 경쟁이 촉발시킨 측면이 강하다. 헨더슨(Gregory Henderson)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중앙집권화 된 동질성이 강력하게 존재해온 사회에서 새로운 국가건설 프로젝트의 절차나 과정에 수반되는 게임의 규칙이 없을 때 민족 내부의 집단들은 중심축을 향해 상승하는 흐름에 참여하려고 했다.¹⁴⁾ 이를 가능케 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오랜 단일 민족 국가적 전통이고, 두 번째 조건이 외세의 식민통치였다. 이러한 흐름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민족주의의 분열적 요소를 지속시키는 힘이었다. 이런 점에서 여전히 우리는 민족주의에 기반 한 민족국가 수립을 이루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에 이러한 분열적 민족주의 전통은 더욱 격화되었다. 미소의 분할점령은 해방을 선사한 방법론이기도 했지만 남북한이라는 지역적 단절과 새로운 강대국들의 인입에 따른 분열과 갈등을 더욱 굽게 만들었다. 해방공간 하에서 남북한 각 지역에는 해내외의 항일운동 세력 뿐만 아니라 일제 하에서 부여했던 친일파들까지 권력투쟁의 장에서 득세하려 하였다. 식민지 하에서의 독립운동처럼 그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국가건설 프로젝트는 이제 명확한 목표가 되었고, 이 프로젝트를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정치지도자들의 권력이 결정되는 순간이 온 것이다. 과거에는 추상적이었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변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친일파들에게는 정치적 생명을 넘어서 인간적 생명이 좌우되는 순간이었다. 그만큼 정치적 각축은 필사적이었다. 민족주의는 이들의 정치적 각축을 위한 명분이었지, 목표가 아니었다. 누가 더

14) 헨더슨, 앞의 책(2000), p. 514.

민족주의적인가를 둘러싼 쟁투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쟁투는 필경 명분론적으로 끝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누가 더 민족주의적’ 인가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식민지 시대에 누가 더 민족 국가 수립운동을 위해 투쟁 했는가이었지만, 이를 수궁할 수 없는 친일파들이 미군정의 비호 아래 강력하게 존재해 있었고, 설혹 친일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좌우 세력 간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나 공정한 재판관이 존재할 수도 없었다.

더구나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의 개입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고질적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국내의 특정 정치지도자들을 후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국제적 경쟁구조인 냉전의 전개에 따라 국가이익을 걸고 그들의 한국인 대리인들을 육성하기까지 했다. 대리인들의 싸움은 곧 강대국의 싸움이 돼버렸다. 일제 식민통치 하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그래도 직접적이지 않았고, 노골적이지도 않았다. 미국과 소련이 연합국의 일원이기도 했지만, 미국에 의존했던 이승만이나 소련에 의존했던 좌파 세력들 간에 각축이 벌어질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는 보다 더 구체적인 목표와 의제를 둘러싸고 후원국가와 대리인의 복잡한 정치게임이 등장하게 되었다. 좌파는 우파를 ‘미국의 주구’ 라고 공격하고, 우파는 좌파를 ‘소련의 괴뢰’ 라고 하였다. 다시 또 우파는 우파 내부에서 한민당, 이승만, 김규식의 중간파, 김구의 한독당 세력 간의 미국을 둘러싼 각축과 갈등이 벌어졌다. 다만 좌파 내부에서는 소련의 권위가 거의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우파 내부에서 만큼의 갈등이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장안파와 재건파, 원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오기섭 세력과 김일성의

빨치산파, 그리고 중국에서 활동했던 연안계 등 간에도 때로는 노골적인 갈등이, 때로는 미묘한 분위기가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을 이정식은 다음과 같이 잘 묘사하고 있다.

해방 후의 여운형과 송진우의 대립, 공산당과 한민당의 대립, 이승만과 공산당의 대립, 임정과 인공의 대립 등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면 이들 모두가 독선적이었다는 것이다. 우파는 우파대로, 좌파는 좌파대로, 누구는 누구대로 각기 자랑할 만한 공적은 있었다. 일제시대에 해외에서 싸웠거나, 지하에서 싸웠거나, 또는 타협을 하면서 교육기관이나 언론기관을 경영했거나,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 모두 유공탑을 세울 가치가 있는 공적들이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국민족을 해방시킨 것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며 임정도 아니고 이승만도 아니었다. 해방은 타력에 의해서 이룩된 것이며 해방을 이룩해준 연합국들도 한국민족을 신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미개한 민족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좌나 우, 국내나 국외의 그 누구라도 좀더 겸허하고 앞을 내다보는 자세를 가져야 했는데, 정계라는 무대에 등장한 요인들은 각자 너무나 자부심이 강했고 공(功)과 이(利)에 예민했다. 그리고 성급했다. 40년 가까이 채우지 못한 욕구를 일조일석에 채우려고 했다. 아직 정치 또는 정쟁의 규칙 내지는 법이 생겨나기 전이었으므로 그 투쟁양상은 노골적이고 거칠었다. 거친 정쟁에서 앞을 내다보고 사색하면서 개인적인 공리보다 민족을 앞세우는 자는 다른 이들에게 이용당할 뿐만 아니라 공격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중략)...박헌영은 이승만을 공격하면서 “독재적인 것을 배격하

고 진정한 민주주의 원칙을 세우자”라고 했는데 사실 그랬어야 했다. 이승만은 독립운동 시절부터 독선적이고 독재적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아왔으므로 박헌영의 비난이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조공의 행동을 볼 때 박헌영은 그러한 비판을 할 자격이 없었다. 박헌영이 영도하는 조공이야말로 너무나 독재적이었다. 박헌영 자신도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이라는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는데 공격을 가한 자는 바로 조공 내부의 ‘대회파’였다.¹⁵⁾

위 글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남한에 국한해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전한반도에 이런 기류가 존재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국가건설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인기를 향상시킨 1946년 3월의 토지개혁은, 분명히 농민들의 ‘세계적 숙망’을 해결하는 것이었지만, 분단된 상태에서는 북한만의 단독 국가 수립을 위해 실행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¹⁶⁾ 만일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소련이 전 한반도의 민족국가 수립을 원했다면 그러한 구상만을 구체화시켜서 공론화의 계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은 우선 당장 북한에서 만이라도 실질적으로 인민들의 사회경제적 삶을 바꿔놓음으로써, 그리고 이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인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이를 추진한

15) 이정식, 앞의 책(2005), pp. 140-141.

16) 이정식은 토지개혁이 남북한 사회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위의 책(2005), p. 209. 수정주의 역사가들은 토지개혁이 아시아에서 볼 때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하』(서울: 청사, 1986), p. 299. 북한 지역에 한정에서 보면 이런 측면이 있음에 틀림없지만 한반도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독립된 민족국가 프로젝트를 저해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요컨대 식민지 시대에 불구화되어 성장한 한반도 민족주의가 민족국가 건설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바로 토지개혁이었다.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화시키기를 원했다. 즉 토지개혁 사업같이 사회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거대한 사업은 근대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고, 이런 의미에서 이 사업의 성공은 북한에서의 근대국가 수립의 중대한 전기가 되었다. 이로써 해방 이후 좌우로 분열된 민족주의의 진영들은 민족의 이름으로 민족분단을 정당화하게 되었다.¹⁷⁾

우리는 식민지시대 이래 한반도 민족주의가 추구하고 지향했어야 할 독립 민족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민족주의 세력간의 협력과 공존, 그리고 이를 담아내는 국민주의, 민주주의, 또는 민중주의 등의 정립이 성공하기는 커녕 오히려 극단적인 분열과 독선의 현실로 귀결되었음을 한국전쟁에서 목격하였다. 전쟁을 통해서 남과 북의 민족주의는 그야말로 이질적으로 변질되었다. 민족주의는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통치담론의 외피로 장식되고 있을 뿐 내용에서는 국가주의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결국 민족주의는 남과 북의 신생국가의 정치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합의 담론으로 승화되지 못했고, 내용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와 결부되지 못했다. 식민지 시기나 해방 직후 시기에서처럼 민족 내부의 일부 집단이나 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의적인 정당화 수단, 혹은 끊임없이 세력분화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되거나 작용하였다. 이후 냉전시기 하의 남과 북의 체제 경쟁과 탈냉전 시기 하의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가 이어졌던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흐름은 일관되게 전개되었다. 남한과 북한에서 민족주의가 겪었던 현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남한에서는 민족주의가 반공주의로 대치됨으로써 이승만과 박정희

17) 최장집, 앞의 책(1996), p. 187.

독재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그다지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특히 이승만에게 있어서 1950년대 중후반 남한 내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여론이 조금이나마 상승하자, 자신의 '북진통일' 입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자신의 정치권력의 약화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그의 판단은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총 투표의 24%를 획득한 유력한 정치인인 조봉암을 1958년에 간첩 혐의로 체포하는 결과를 낳았다.¹⁸⁾ 반공과 북진은 이승만이 내세웠던 권력유지를 위한 중요한 명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만으로는 다원적이면서도 민주적 제도를 갖추고 있던 남한을 통합시킬 수 없었다. 민족주의는 여전히 통합을 위해 필요한 일정한 힘을 갖고 있었다. 비록 통합을 위한 민족주의적 담론을 정교하게 구축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원성을 갖고 있던 남한 사회에서 민주적인 제도에 대한 신념을 확고하게 했더라면 이승만 정권은 좀더 안정적인 기반을 가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쟁을 이제 막 경험했던 이승만 정권에게 이 두 가지를 다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을 것이다.

민족주의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호소는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 가서야 나타나기 시작했다. 박정희 역시 반공주의를 명분으로 집권에 성공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산업화의 동력을 삼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는 '조국 근대화'를 기치로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동원과 소통합의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가 지니고 있는 폭발적인 역동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¹⁹⁾ 본격적인 근대

18) Yong-Pyo Hong, *State Security and Regime Security: President Syngman Rhee and the Insecurity Dilemma in South Korea 1953-60* (Oxford: St Antony's College, 2000), pp. 112-113.

화 정책을 추진하기 전인 1963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는 '민족적 민주주의' 라는 용어를 통해 국가적 독립과 외국의 지배와 간섭, 특히 국내 문제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주권 확보의 시급함을 역설하였다. 그는 미국의 한국 원조 정책과 운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물론 그의 언설에서의 '민족적' 은 윤보선 등을 겨냥한 선거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중에 그가 제기한 민족 담론의 원형적 성격을 갖는다.²⁰⁾ 나아가서 박정희는 '민족주체성' '민족중흥' 을 내걸고 이순신이나 삼별초, 충효사상 등 전통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오늘에 되살려" 내려고 하였다.²¹⁾

다른 한편 박정희의 민족주의는 북한과의 차별을 이뤄내기 위한 분열과 저항의 민족주의이기도 했다.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의 전형으로서 1968년 12월 5일 선포된 '국민교육헌장' 은 그 해 있었던 청와대 기습 사건, 푸에블로 나포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휴전 이래 가장 많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었음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박정희의 민족주의는 국가주의와 결합되어 있었거나 박정희 자신의 정치권력을 남한 국가와 등치시키면서 이를 정당화하는 하위 기제로서도 활용되었다. 민족주의는 여전히 분열적 통합의 논리로서 강하게 존재했다. 박정희 이후에도 남한의 민족주의는 이 범위를 크게 뛰어 넘지 못했다. 무엇보다 1971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박정희에

19) 박호성, 앞의 책(1997), p. 72.

20) 김형아,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유신과 중화학공업』(서울: 일조각, 2005), pp. 157-159.

21) 박정희 정권이 전통사회로부터 민족주의적 상징물을 창안한 노력에 관해서는 전재호,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 연구: '역사의 이용' 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18권 1호(2002), pp. 146-151을 참조할 것.

의해 조장되고 촉발된 지역주의는 남한 내에서 민족주의라는 명분이 갖는 감성적인 호소력조차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한 광주 학살은 이러한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유지된 분열적 민족주의를 봉인하는 사건이었다. 다만 박정희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산업화와 경제발전은 민주화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통합적 민족주의의 내용물을 채울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남한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비교적 초기부터 사회주의적 정치·경제·문화체제라는 형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²²⁾ 역시 식민지 시대에 항일 운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민족주의 좌파들에 의해 국가가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초창기 이들은 국제주의적 혁명관을 견지해야 했던 이념적 입장과 소련 및 중국의 후원을 받았다는 역사적 경험으로 해서 민족주의를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는 못했다. 북한에서 민족주의가, 집권세력이 반대세력 또는 비판세력의 입막음을 할 때 구사되는 전가의 보도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3년 스탈린(Josif Stalin)의 사망과 더불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일성(uniformity)이 급격히 약화되면서였다. 1956년 소련 공산당 제20차 당 대회에서 스탈린에 대한 격하가 이뤄지면서 공산주의 권은 탈스탈린화(de-Stalinization)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북한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탈스탈린화로 인해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는 국가간의 관계에서 명목상으로, 또는 동유럽이라고 하는 한정된 지역에서 잠재적으로 통용되는 것이고, 실제로 각 국가들은 다양하지만, 각국의 정치

22) 이 점에 관해서는 찰스 암스트롱, 『북조선 탄생』(파주: 서해문집, 2006)을 참조할 것.

적 조건에 따라 스탈린에 의해 부과된 당-국가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도전과 저항이 발생하였다.²³⁾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변동은 북한에 와서 중국 및 소련과 연계된 연안계 및 소련계 공산주의자들의 종파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대한 김일성의 응전에 의해 폭발된 사건이 바로 '8월 종파사건'이었다.²⁴⁾ 이 사건 이후부터 북한 지도부 내에서 '민족주의'라는 용어가 은밀하게 통용되었고, '주체사상'의 구상이 움트기 시작했다.²⁵⁾

주체사상은 북한이 사고하는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생각을 집약해서 보여준다. 그것은 태생적으로 소련, 중국 등의 사회주의 대국을 겨냥해서 제기된 것이었다. 1950년대 중반의 '8월 종파사건'과 탈스탈린화 이후 점차 강도를 높여가던 소련과 중국간의 분쟁, 1960년대 초의 쿠바 미사일 사태와 월남전에 대한 소련의 유약한 모습, 1960년대 중반 중국의 문화혁명은 북한의 사회주의 형제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렸다.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식민지 시대 항일투쟁의 경험의 정신적 기반이었던 민족주의적 담론에 대한 의지로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던지도 모른다. 이는 북한 민족주의의 저항적 성격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²⁶⁾ 그러나 주체사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67년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들과 함께 투쟁했던 갑산파들을, '유일사상체

23) 동유럽에 대한 탈스탈린화의 영향에 대한 가장 정교한 연구로는 Grzegorz Ekiert, *The State against Society: Political Curses and Their Aftermath in East Central Europ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을 참조할 것.

24) Andrei Lankov, *Crisis in North Korea: The Failure of De-Stalinization, 1956*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을 참조할 것.

25) 김국후, 박길용, 『김일성 외교비사』(서울: 중앙일보사, 1994), pp. 111-115.

26) 박호성, 앞의 책(1997), p. 138.

계'를 어겼다는 죄목으로 숙청함으로써 대외적인 측면에서만 민족주의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내적인 정치권력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임을 드러냈다. 그 직후부터 김정일이 권력후계자의 지위를 확립하고, 그에 의해서 주체사상이 정교화 되고, 정교화 된 주체사상은 김정일의 권위와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순환적 과정을 보면 결국 북한에서도 민족주의는 정치권력을 위한 장신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체사상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조선민족제일주의' 등 북한의 민족 담론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혈연적 유대에 의한 민족적 동기를 강조하지만 그 핵심에 바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다는 사실이다. 즉 수령과 당에 의한 영도가 있고 "위대한 주체사상이 있으며,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것이다. 나아가서 김정일은 "수령을 모신 김일성민족"이라는, 과거 구(舊)동독에서 만들어내 바 있는 '사회주의 독일민족'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상상력을 보여준 신조어를 만들어내기까지 했다.²⁷⁾ 이쯤 되면 민족이 상위에 있는 것인지, 지도자가 상위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그랬을 때 북한이 1990년대 이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민족대단결'의 논리는 결국 북한 중심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임은 필지의 사실이다. 북한은 위기 상황 속에서 민족주의 정서를 표면화, 활성화시킴으로써 대남 공세의 축을 민족 중심으로 설정하고, "사회주의 애국심을 민족주의로 포장하여 통일의 도구적 논리로

27) 북한의 민족주의 담론에 관해서는 김창근, "북한 지도부의 민족·민족주의 담론," 『북한연구학회보』, 7권 2호(2003)을 참조할 것. 재인용된 부분은 이 글 p. 48에서 따온 것이다.

진개”하고 있는 것이다.²⁸⁾

공산권이 무너짐으로써 외교적 고립화가 심각해지고, 김일성 사망으로 체제의 구심점이 사라지고, 만성적인 경제침체의 결과물인 식량난이 북한 전역을 휩쓸고 있을 때, 북한은 필사적으로 ‘원(原)민족주의’(proto-nationalism)에 기대었다.²⁹⁾ 북한이 택한 선택의 압권은 1993년 9월의 단군릉 발굴이었다. 그해 3월 북한이 핵 비확산 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을 탈퇴하고, 4월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채택한 것에 이어 단군릉을 발굴했다는 것을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 외부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함께 남한에 대한 통일담론의 우위를 과시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 다목적 카드가 아닐까. 이것은 순전히 추론에 불과하지만 고구려 시대의 유물도 아닌, 역사적 실재 자체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발생한 단군릉을 느닷없이, 그것도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발굴했다는 것은 순수하게 믿기 어렵다.³⁰⁾ 그리고 다음 해 1월에는 왕건릉까지 복원함으로써 사회주의 북한은 완벽하게 종족적 우월성에 기초한 민족주의 북한으로 전환을 겪게 된다.³¹⁾

28) 위의 글, p. 45. 이러한 논리를 잘 보여주는 북한의 문헌은 다음과 같다. 김현환, 『김정일장군 조국관』(평양: 평양출판사, 2001); 장 석, 『김정일장군 조국통일론 연구』(평양: 평양출판사, 2002); 최기환, 『민족과 선군정치』(평양: 평양출판사, 2003); 송국현, 『우리 민족끼리』(평양: 평양출판사, 2002);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문 100답』(평양: 평양출판사, 2003); 송승환,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조국통일』(평양: 평양출판사, 2004); 윤성식, 『자주통일의 기치따라』(평양: 평양출판사, 2004). 최근 들어 이러한 문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민족주의적 통일 담론을 통해 대남 정치공세를 강화하려 한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29) 이 표현은 홉스봄(Eric Hobsbawm)의 것으로 최장집, 앞의 책(1996), p. 180에서 재인용.

30) 이에 관해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전재호, 앞의 글(2002), pp. 159-162를 참조할 것.

31) 정영철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민족주의를 진보적인 사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시도는 마치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북한은 민족에 기초한 자주성을 ‘견결하게’ 수호하고 있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 하고 반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식민지 시기부터 지금까지 남북한을 아우르는 한반도 민족주의가 갖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저항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기초로 삼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다. 그러나 북한이 1950년대 중반을 넘어서 ‘자주’의 담론을 점차적으로 내세우고 급기야 주체사상을 공식이데올로기로 격상시켰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중국 및 소련에 대한 입장이 자주적이었느냐 하는 의문은 남아 있다. 실제로 1960년대 초반 중소 분쟁의 와중에서 소련이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를 급감시킨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 북한 경제는 사실상 소련 및 중국, 그리고 기타 동유럽 국가들에 의존되어 있었다.³²⁾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 특히 미국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에 대해서 자주적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한과 비교했을 때 보다 더 적실성이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다시피 한 북한에게 자주성이

이라고 평가했는데, 무슨 근거에서 그렇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그 특징: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4권 2호(2001), p. 254. 북한의 민족주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민족주의의 보편성에 주목할 때 비로소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이 글에서 인용하고 있는 최장집과 박호성의 글을 참조할 것.

32)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알렉산더 포포프, “북한의 경제침체와 대외경제관계: 1970년대 후반~1990년대,” 『북한사회주의 경제의 침체와 대응』(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5)을 참조할 것.

란 말은 소외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자주성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지금도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 경제를 놓고 자주적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남한의 경우 북한에 의해 항상 따라붙는 “미제의 괴뢰”라는 인식도, 최근에 와서는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남한이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으로 미국에 깊숙이 의존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어느 때나, 똑같은 정도로 그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1970년대 초 비록 실패에 그치고 말았지만 박정희의 핵무기 개발과 같은 독자적 군사노선 기도와 1960년대 말 박정희의 ‘자주국방’이라는 담론은, 마치 1960년대 초 김일성이 중소에 의존했을 때 안보를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국방에서의 자위’ 노선을 제기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남한의 경제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남한의 대미 의존도는 현저하게 떨어졌다. 비록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의존도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해도, 최근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협상에서 보듯이 상당한 변화가 있다.

둘째로는 남북한 모두 민족주의 담론이 내부적으로 자체 내의 권위주의적인 독재 정치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한반도 전체로 볼 때 분열적인 소통함을 만들어내는 데 민족주의가 작용했던 것이다. 이것의 가장 커다란 폐해는 남북 모두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남한에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발전이, 북한에서는 민주사회주의의 발전이 각각 저해 되었다고 볼 수 있다.³³⁾

33) 최장집은 바로 이러한 시각이 민족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 내의 비판적 견해의 결과이며, 이렇게 볼 때 민족주의를 민족공동체의 중심적인 가치 및 규범으로서, 그리고

셋째, 남북한 모두 민족주의를 통해 상대방에 대해 정통성을 내세우는 데 최선을 다했다. 이것은 마치 식민지 시기와 분단국가 건국 시기에 항일운동 세력들 간의 정통성 경쟁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과거에도 친일파를 제외하면 실제로 누가 더 항일운동을 했는가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없다. 또한 명백한 친일파를 제외한다면 새로운 국가건설과 산업화 등 실로 막중하고 다양한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의제에 따라 누가 더 노선과 정책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 설득력을 높이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었는가에 따른 평가가 우선적이다. 정통성은 현실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지, 과거에 의해서 무조건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남북한은 끊임없이 정통성 논쟁을 했고, 상대방에 대한 흠집 내기에 열을 올렸다. 최근에 와서 남북한 간의 교류와 대화가 이뤄지면서 이는 다소 다른 양상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 구도에 변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³⁴⁾

그런데 이 세 가지 특성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저항을 둘러싼 논쟁의 지점은 국내적인 정권 강화와 정통성 논쟁의 핵심이다. 또한 정통성 논쟁은 국내적인 정권 강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정통성 논쟁은 저항이라는 측면을 둘러싼 양측 간의 경쟁에 의해 가속화되기도 한다. 말하자면 세 가지 특성이 일종의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면서 분단 극복에 장애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민족주의는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퇴영적이며, 분단을 조장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실천적 무기로서 인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갈파했다. 앞의 책(1996), p. 172.

34) 북한은 남한 내의 보수적인 정파를 '주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도 결국 과거 대남 정통성 주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장집과 같이 “한국민족주의의 추구가 어떤 민족적, 문화적 특수성이나 한민족의 종족적 우월성이나 일체성으로부터 발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주도하고 이를 구성하는 원리를 ‘국민주의와 민주주의’에서 찾음으로써 민주적 평등성을 강조하는 보편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든, 박호성과 같이 “민족통일을 최대의 민족사적 과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민족주의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이념”이기 때문이든 미래를 위한 통합을 위한 실천적 민족주의 개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적 민족주의 개념은 당연히 동북아에서 가장 약소민족인 우리가 주변 강대국들과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해 나갈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했을 때 한반도 민족주의는 우리와 동북아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I. 통합과 선린의 한반도 민족주의를 위하여

한반도 민족주의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모색을 위해서는 역시 민족주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등장했고, 민족주의와 국가의 문제, 그리고 민주주의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린쓰(Juan Linz)와 스테판(Alfred Stepan)의 분석이 유용하다고 하겠다.³⁵⁾ 이들의 논의가 유용한 이유는 이들이 비교적 최근의 민주주의의 이

35) Linz an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여기서 이 책의 pp. 22-35를 참조하였다.

행을 한 다양한 지역의 사례들을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신조들이 결국 한반도 민족주의와 결합되었을 때 이 글이 논구하려는 민족통합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점에 도달하였다. 린쓰와 스테판은 민주주의 공고화를 분석하면서 국가건설과 민족건설은 겹치기도 하지만, 개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른 과정이라고 보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건설이 민족건설보다 선행되었고, 국가가 국가민족(state nation)을 건설하고, 이어서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민족을 만들어 나갔다. 물론 이는 서구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민족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이들의 명쾌한 구분이다. 민족은 이를 관리하는 관리가 없으며, 리더십의 역할에 대한 규정도 없고, 운동에 대한 민족적 정서를 담을 그릇이나 민족주의적 조직도 없고, 민족구성원이라는 명확한 구분에 대한 규정도 없고, 민족구성원의 권리나 의무에 대한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만일 국가의 통제가 없으면 (민족을 위한) 바람직한 행태 역시 법적으로, 또 정당성으로 부과될 수도 없다. 요컨대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가 존재할 때 민족도 그 형태를 갖춘다는 것이고, 이는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주장과도 맥락을 함께 한다.³⁶⁾

소수민족이 있는 다종족 사회에 대한 분석을 행한 이들에 따르면 민족국가와 민주화 과정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비민주적인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족국가 정책은 민주적 정책과는 다른 논리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볼 때 민족국가정책이란 국가의 지도자들이 문화적 동질성을 증대시킬 것을 목적으로 국가정책의 전국화(nationalization)를 추구하

36)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 ed. (London: Verso, 1983).

는 정책이며, 구체적으로는 첫째, 지도자들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국가가 민족의, 그리고 민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둘째, 그리해서 지배적인 민족의 언어가 유일한 공식 언어가 되며, 학교에서도 유일한 공용어가 된다고 한다. 셋째, 다수 지배 민족의 종교가 특권적인 위상을 갖게 되고, 넷째, 지배민족의 문화적 상징은 모든 국가상징에서 특권화 된다고 한다. 반면에 민주적 정책이란 국가건설과정에서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시민권, 즉 모든 시민들이 동등한 개인권을 부여받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민족국가 정책과 민주적 정책이 일치할까? 이들은 첫째, 경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 내 거주자들이 그 민족의 한 가지 주관적인 이념과 자신을 일체화할 때, 그리고 민족이 실제로 국가와 동일시될 때라고 한다. 둘째, 국가 경계 밖에 어떠한 의미 있는 미수복지(irredenta)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충족된다. 또한 국가 내에 하나의 유일한 민족이 존재하거나 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그리고 국가 내에 문화적 다양성이 낮을 때 충족된다고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만 국가의 지도자들이 민주화 정책과 민족국가 정책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데, 즉 정체(政體)와 주민간의 그러한 일치하는 민주적 민족국가의 창설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민주적인 국가들은 매우 높은 정도의 민족국가 동질성을 갖고 있으며, 가능한 민주적 이행을 착수하는 예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들은 현대 민주적 통치는 국가성과 불가피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국가가 없으면, 시민권(citizenship)도 없으며, 시민권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기 때문이다. 민족이라는 감정에 토대한 범주보다는 보다 특정한 범주인 시민의 존재야말로 다민족사회에서의 민

주주의의 공고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국가가 없으면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공식적인 인정도 존재할 수 없고, 시민권이 없으면 투표도 존재할 수 없고, 투표 없이는 현대의 복합적인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인 것이다. 민족주의가 민주주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민족주의가 투사해야 할 분단 극복, 즉 남북한 공존 또는 통합을 사고할 때 견지해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강의는 충분히 경청의 가치가 있다. 그 역시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만일 한국어 안에 ‘demo’ 를 가리키는 자유로운 시민의 지평과 혈통으로 이어지는 종족으로서의 민족을 구별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면, 그 개념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민주시민으로서의 ‘demo’ 의 개념은 혈통에 근거하는 종족으로서의 민족 개념과는 양립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단이라고 하는 불행한 현상을 민주적으로 타파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국민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스스로 법률을 만들고 주권을 행사해 가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반을 확보한 민족 개념이 필요하다고 한다.³⁷⁾ 즉 ‘민주시민’ 이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인 ‘종족’ 보다 우선권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³⁸⁾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 통합과 관련하여 그가 역설하고 있는 다음의 구절은 인용의 가치가 있다.

37) 하버마스, 『현대성의 새로운 지평: 하버마스 한국방문 7강의』(서울: 나남출판, 1996), p. 199.

38) 위의 책, p. 188.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제국주의적 세력경쟁의 결과 두 쪽으로 분열되었다고 할 때, 민족통일의 완성은 논의의 여지없이 전적으로 정당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섰다고 해서 분단된 민족이 어떤 정치형태로 재결합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중립적 태도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과 관련해 공화주의적 혹은 민주주의적 이념은 종족적 이념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³⁹⁾

이 점에 관해서는 최장집 역시 동의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민족주의는 여전히 중요한 ‘자산’이다. “민족주의의 토양 위에서 체제의 성격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실현하는 사회로 발전시키는 일이 부정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⁴⁰⁾ 박호성도 “통일은 민족적 변혁을 가리킨다. 분단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역설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⁴¹⁾ 민족통합은 민주주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박호성 역시 민족주의는 당위이자, 민족통일이라는 당면목표를 위한 외면할 수 없는 이념이다.⁴²⁾ 하버마스과 한국인 학자들인 최장집과 박호성의 차이는 역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중 어느 쪽에 강조점을 찍을 것인가를 두고 갈라진다. 유럽이라는 허구적 민족주의가 싹틔던 지역 출신의 하버마스에게, 또는 린쓰와 스테판에게 민족주의가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었다. 비록 최

39) 위의 책, p. 190.

40) 최장집, 앞의 책(1996), p. 194.

41) 박호성, 앞의 책(1997), p. 155.

42) 위의 책, p. 156.

장집이 분단극복을 뜻하는 통일이 민족주의 이념의 추구와 그 기초 위에서 이뤄져야 할 필연성은 없으며, 무엇보다도 통일은 당위이며 필연이라고 사고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이것은 그럴 수도 있다는 열린 가능성에 대한 점검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을 뿐이다.⁴³⁾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핵심은 통합이고 민주주의다. 그리고 이때의 통합은 종족적인 관점에서의 남북한의 대통합임은 물론이지만, 그것이 종족에 기반한 통합으로 민족주의의 외연을 설정하는 것은 기껏해야 한반도 민족주의 형성 초기에 등장했던 아(我)와 비아(非我)의 구분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비극적인 순간에 대한 기억을 영화 메멘토(Memento)의 주인공처럼 끊임없이 상실하는 것이며, 20세기 후반에 한반도 내외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투사해야 할 민족주의는 한민족의 종족성(ethnicity)에 기초하여 이뤄내는 통합, 즉 남북한의 통합임에는 틀림없지만,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종족성에 기초한 남북한의 통합과정과 이를 넘어서서 상정되는 통합 간에는 순차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원(原)민족주의에 대한 인위적인 기억, 또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감정적인 민족관에 기초한 남북한 통합은 실제와 부합하는 지도 불분명하지만, 한반도 민족주의의 분열적 특징이라는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통합이 실현가능한 프로젝트인지는 더더욱 불확실하다. 남한 내의 민족해방(NL) 계열의 민족주의 운동세력과 북한이 그러한 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지만, 그렇게 해서 실현하는 통합이 북한 정치체제로의 통합을

43) 최장집, 앞의 책(1996), p. 177.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리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아무 것도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종족성에 기반 한 통합을 위한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보다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해야만 한다. 민족주의는 내부 구성원이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자유를 향유하며, 이것이 법적으로 존중되는 그런 질서 내로 통합되는 것을 상정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종족성에 따른 경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상상된 공동체'의 범주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명제에 이르게 된다. 남북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즉 그들이 인종적으로 한민족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공동체적 삶 중 어느 하나라도 한민족과 함께 영위하는 사람들이라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시민적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민족은 민족으로 범주화되는 집단의 생존과 재생산,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며, 이를 추구해야 만이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민족은 국가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 민족이 민족으로서 혼란스런 개별적 인간들의 총합으로서 환원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이민족과의 구분으로만 치환될 수도 없다. 이렇게 된다면 번영은커녕 생존조차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⁴⁴⁾ 국가는 반드시 민족과 그 경계를 일치시키지는 않더라도, 민족

44) 이런 점을 지적할 때 곧바로 세계화를 연상할 필요는 없다. 세계화 현상이 거스를 수 없는 21세기에는 대외적인 경계가 모호해지고, 국가 단위 자체가 갖는 힘이 약화

구성원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내적으로는 개별적 인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리·조정하는 존재로서의 의미와 국가 또는 민족 외부의 이민족으로부터 오는 위협 또는 이민족과의 협력을 주도하는 대표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국가는 민족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가 추구해야 할 민족통합 역시 국가를 무시하고서는 가능하지도,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

남북한이 처해 있는 현실은, 솔직히 말해서 매우 어렵다. 한반도 민족주의가 남북을 잇는 매우 중요한 끈이지만, 여전히 그것은 남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분단국가의 존재로 해서 분열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이끌고 있는 강력한 힘은 각각의 분단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정치권력이다. 서구에서의 민족주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국가를 통해 담지 되고 있는 정치권력이 민족주의라는 가공의 이념을 동원해서 민족을 만들었다면, 한반도의 경우에도 이것이 통용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한반도 민족주의는 남북한 모두에게 단일 민족 국가적 전통과 과거에 대한 향수로서는 존재할지 몰라도 과연 그 자체로서 통합의 동력으로 자동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 한반도 역시 서구가 경험했던 인위적이고, 의도적이고, 정교하게 기획된 민족주의 프로젝트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되물어야 한다. 분단 현실 속에서 같은 민족 간에 분열과 갈등, 폭력을 낳는데 오히려 기여한 한반도 민족주의가, 단지 그것이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국가가 무의미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속에서 국가가 갖는 역할과 기능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실 속에서 터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좁다. 남과 북이 ‘우리는 한 민족이니까’ 통합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면 통합이 이뤄질 수 있을까. 결국 민족주의에 기대어 추구하는 통합은 당위의 영역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 민족주의의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시작이지만 우리에게서 민족주의가 과거 역사에서 노정했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다. 최장집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경청의 가치가 있다.

한국민족주의가 현실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해야 할 이유는 없다. 민족의 정체성과 그것에 기반하는 민족공동체의 복리를 증진하고, 이러한 공동체의 토대 위에서 정치적 통일을 이루는 것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민족주의는 탈냉전시대에 통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민족의 자산임에 분명하다.⁴⁵⁾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반도 민족주의의 당위론적 성격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프로젝트로서 한반도 민족주의를 사고하는 것이다.

민족통합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반도 민족주의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의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45) 최장집, 앞의 책(1996), p. 194.

〈전제 1〉

남한이든, 북한이든 자신의 민족주의에 기초해서 상대방에 대해 민족적 정통성을 운위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남북한 정부 차원이든, 남한 내의 민간 차원이든 민족주의에 기대어서 정통성을 평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통성은 변화하는 것이고, 주관적인 것이다. 이미 우리는 한반도 민족주의의 역사에서 수도 없이 그를 둘러싼 쟁투와 그로 인한 비극을 충분히 경험했다. 이는 좁게 보면 상대방의 존재와 체제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전제 2〉

남한이든, 북한이든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도와 줘야 한다. 과거 냉전 시대처럼 각각의 동맹관계에 의존해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강압하는 것은 탈냉전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전략적인 의미를 상실했다.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남한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1990년대 중반처럼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이 있을 때 남한이 ‘통미봉남’ (通美封南)을 내세워, 또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내세워 이를 저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설령 이를 통해 어느 일방이 의도적으로 타방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타방의 개입이 두려워서 소극적으로 나서거나 간에 타방의 동맹국과 관계 개선을 도모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한반도 민족주의는 남북한간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전제가 충족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을 위한 전제가 필요하다. 한반도 민족주의는 이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그것을 남북 통합과 평화로운 동북아의 구성원으로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주체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남한이 바로 그러한 주체로 보인다.

〈전제 3〉

남한은 한반도 민족주의가 미래 한반도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 스스로 한반도 민족주의의 긍정적인 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미래 한반도의 운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관련된 민족 국가적 프로젝트에 대해 세심한 구상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한반도 민족주의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린쓰와 스테판이 지적했듯이 국가가 국가 민족을 만들고, 이 국가 민족이 민족을 만드는 것이다. 비록 우리 민족이 오랜 단일 민족 국가적 전통을 갖고 있지만, 남북한은 근대적 의미의 국가를 분단 상태 하에서 건설했고 반세기가 지났다. 이 반세기는 우리 민족의 단일 국가적 전통 속에서 보면 매우 짧지만 근대화 와 산업화를, 분단된 상태 하에서 이룩했고, 자신의 영토를 강고하게 지배하고 있는 정치권력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 민족은 다시 새로운 국가 민족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왜 남한이어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남한이 민주화를 먼저 이뤘고, 이를 지속시킬 수 있는 경제발전을 이뤘으며, 세계화

시대에 개방된 사회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의 전략은 남한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전략 항목의 세부적인 내용은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다. 관련되는 한에서만 간단히 언급하겠다.

〈전략 1: 민주주의의 발전〉

오늘날 남한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절차적 민주화에는 성공한 듯 보이지만 절차에 걸맞은 내용을 담지하지 못하고 있다. 역시 그 문제의 핵심에는 정당체계의 저발전이 도사리고 있다.⁴⁶⁾ 정당체계가 통합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사회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표출할 수 있고, 정치과정에 투입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 내에 존재하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공적 관심을 기울여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당체계만을 들어 얘기할 수 없는 수많은 관행과 규범, 제도적인 문제가 존재하지만, 역시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당체계이다. 더구나 정당이라기보다는 조선 시대 이래의 분당(朋黨)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는 남한의 정당들로 구성된 정당체계의 개혁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의 정당체계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최소한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민족통합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일이

4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서울: 후마니타스, 2005)을 참조할 것.

다. 그러나 통합과 관련해서는 그 중요성이 증폭된다. 통합이 발생했을 때 예상 가능한 수많은 국가적 과제는 말할 것도 없고, 통합된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의 각축은 자칫 정치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역시 이를 해결하면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정당체계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아직은 서구적 정당체계가 낯설다. 남한이라는 민주주의 공고화로 이행하고 있는 시험장에서 정당체계가 정착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한반도 민족주의 프로젝트의 핵심적 전략이다. 민족통합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버마스는 민족통합을 위해 민주화가 갖는 두 가지 장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민주화는 남한의 생활상이 북한 동포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 주며, 다른 한편, 남한에서도 사회적 통합을 견고하게 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통합과정에서 나타날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장치인 자유주의 사회가 성숙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통일이라는 정치적 목표는 언제나 꼭 시민의 자유 실현이라는 이상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해야만 민족통합을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자유마저 버리고자 하는 민족주의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⁷⁾ 통일의 과정은 반드시 민주주의 체제로의 발전과 병존하는 것이어야 한다.⁴⁸⁾ 이러한 명제는, 이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 즉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흡수통일은, 남한이 어떤 체제이고, 남한이 추구하는 프로젝트가 무엇이든지간에 남한에 의한 통일을 말하는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누가 먹고, 먹히우는’ 통일을 말

47) 하버마스, 앞의 책(1996), p. 186.

48) 최장집, 앞의 책 (1996), p. 195.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만일 남한이 진정한 의미의, 또는 공고화된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았다면 통일을 주도할 수도 없으며, 한반도 민족주의의 구현을 통합을 통해 이뤄낼 자격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 2: 경제발전〉

역시 경제발전의 지속 여부는 남한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이다. 오늘날 남한 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장애에 봉착한 듯이 보인다. 남한이 통합과정에서 낙후한 북한 경제를 끌어안고, 지원해 주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통합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통합이 남북한 경제 모두에 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다. 독일 통일의 예에서 보듯이 통합 과정의 단초가 만들어지면 아무리 신중하려 해도 통합에 대한 민족주의적 열망이 발생할 수 있거나, 정치인들에 의해 성급한 통일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이럴 경우 민족 경제에 미칠 영향은 막대하다. 이러한 충격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서 경제력을 끌어올리거나, 적어도 시장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는 남한의 능력을 벗어나 있다. 남한으로서는 당장 남한 경제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을 갖고 임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통합된 민족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성찰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남한 경제가 지금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흡수통일’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노

력이 지금부터 이뤄져야 한다.

남한 경제의 대북한 우위는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하는 조건을 제공했다.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력 우위에 서기 위해 경제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이는 남한만이라도 경제체제나 경제규모의 측면에서 과거 40여 년 동안 이룩한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서 장차 한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경제공동체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력의 격차가 흡수통일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남한이 이를 표면화하거나, 의도적으로 활용하려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없다. 물론 경제력의 격차는 북한 정권에게 북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 의식해야 할 만큼 남한 경제가 한가한 사정에 있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에 대한 남한 정부의 인식과 태도에 있다.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치적 레버리지를 가지려고 한다면 이는 북한의 의심을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대북 정책 전략에서 좀더 상세하게 언급하겠다.

〈전략 3: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남한은 오히려 국가목표의 정체성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남한 자신이 무역 등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해 냈으면서도 최근에 와서는 개방화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주’의 담론이 정치, 경제 등의 영역에서 자주 운위되고 있으며, 이때 민족주의가 이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활용되는 현상도 목도된다. 개방화는, 예컨대 외국인 노동자들

이나 해외동포들의 이주 현상에서, 또 주로 교육 부문에서 나타나는 조기학과 같은 현상에서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다. 단순히 정치, 경제적인 개방화만이 아니라 교육이나 문화 영역의 개방화가 돌이킬 수 없는 폭과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는 개방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입지를 갖고 있다. 국제사회와 타 민족과의 교류와 협력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 물론 개방화를 위한 우리의 제도적, 규범적 기준이 확고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개방화를 위해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해서는, 개방화도 정체성도 다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족통합을 위한 한반도 민족주의 프로젝트에서, 무원칙한 개방화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 유의한다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열린’ 공간으로 세계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고, 인권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 그러했을 때 민족의 번영은 물론이고, 북한의 동포들도 포용할 수 있는 민족의 용광로가 될 수 있다.

〈전략 4: 공존적 대북 정책〉

대북 정책은 북한에 대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정책이다. 오늘날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은, 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두고 남한 사회 내에 깊은 갈등의 골을 각인시키고 있다. 포용정책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목표 하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남한 사회 내부에 반목과 대결을 낳고 있다. 만일 포용정책이 진정으로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을

놓는데 성공했다면 아마도 남한 사회 내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최소화되었을 것이고, ‘남남갈등’에 대해 그리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포용정책의 옹호자들은, 포용정책이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포용정책이 아무리 강력하게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포용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화해와 협력은 남한이나 북한의 어떤 정책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 모두가 화해와 협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이 크다는 확고부동하고, 경험적인 인식을 가질 때, 또는 그러한 인식이 가능한 남북한 관계의 구조가 확립됐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인식이나 구조가 남한의 대북 정책에 의해 좀더 빨리, 좀더 분명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중요한 것은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배척함으로써 해서 남한 사회 내부의 갈등이 확산된다면 그것은 한반도 민족주의 프로젝트를 통합의 민족주의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북 정책은, 따라서 화해와 협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존을 목표로 해야 한다. 두 개의 분단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인정이 우선이고, 그러했을 때 화해와 협력도 더 빨리 올 수 있다. 동서독의 예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⁴⁹⁾ 남한이 남북관계를 주도해서 화해와 협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정책은, 그 자체로서 북한에게는 위협으로 인식

49) 포용정책의 옹호자들은 동서독 통일이 바로 서독의 동방정책(Ostpolitik), 즉 독일 식 포용정책의 결과물이라고 굳게 믿는 듯 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존정책이었다.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공존을 위한 대북 정책은 어떤 정책이어야 하는가. 원칙이 분명한 정책이어야 한다. 그 원칙은 상호주의일 수도 있고, 정경분리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원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외를 수반해야 한다. 남북한 관계가 상호주의와 정경분리로 관리될 수 있을까.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은 가급적 최대한 제공한다. 단, 물품으로 제공한다. 식량이나 비료, 의약품 등 북한 동포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물품은 정치적인 상황과는 관계없이 지원되어야 한다.

둘째, 민간 차원의 남북 경협이나 교류는 철저하게 민간의 논리에 맡긴다. 여기서는 경제협력 분야에 주로 국한되겠지만, 경협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최근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정부가 곤혹스런 입장에 빠진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물론 남북관계에서 민간 경협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기로 쉬운 일이 아니다. 당장 개성공단 사업이나 심지어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에도 정부는 이미 중요한 행위자로 개입되어 있다. 만일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 차원의 교류나 경협은 철저하게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과거 서독이 그랬듯이 정부가 인도주의적인 대북 지원을 제외하고 경제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북한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

넷째,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 적어도 대북 정책 분야에서만큼은 반드시 초당파적으로 합의를 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국회 내에서 여야간의 갈등 양상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민주

화의 진전에 따라 가능할 수 있고, 또 가능해야만 한다. 한반도 민족주의의 부정적 측면, 끊임없는 소분열의 역사를 극복하지 않으면 보다 상위의 통합을 이뤄낼 수 없고, 또 이뤄낸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또 분열로의 회귀가 가능하다. 작은 통합을 이뤄낼 수 없는 경우 큰 통합은 무망한 노릇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를 좀더 진전시키면 민족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는 우리 민족이 주변국들과의 평화롭고 선린의 정신이 지배하는 관계를 갖지 못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다.⁵⁰⁾ 가능하다면 국회에서 여야 각 정파들이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는 것도 필요하다. 집권 여당은 야당들과의 합의 없이는 어떤 대북 정책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야당 역시 정부·여당이 솔직하게 협력을 구할 경우 이를 문제 삼지 않으며,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것을 공약하는 것이다. 이런 조치가 일종의 관습처럼 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남남갈등이 극심한 남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의 결의안이나 아니면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겠다.

이제 대북 정책의 목표는 남북한간의 공존이 되어야 한다. 적절한 금언이 될지 모르겠으나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면 죽는다”라는 표현이 민족통합에 필요한 말이다. 통합을 하려면 오히려 분열되기 쉽고, 공존을 하면 오히려 통합이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이다. 공존을 통해 남과 북이 각각의 체제를 건강한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면 오히려 통합이 더 빨리 가능할 수 있다.

50) 조선 말 개항기에 국내 정치세력들이 청, 일본, 러시아 등 외세를 불러들임으로써 우리 민족의 생존뿐만 아니라 이 국가들 간의 각축이 벌어졌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전략 5: 국제사회와의 협력연계〉

한반도 민족주의에 기초한 민족통합 과정 또는 통합 후의 결과는 동북아 국가들에게 걱정과 위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는 전 인구를 다 합해도 동북아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 작다. 경제력에 있어서나, 국력의 규모로 볼 때에도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약소국이다. 그런데 주변국들이 걱정하는 것은 첫째, 한반도의 민족통합 과정이 혹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당장 민족통합 과정이 급격하게 발생하여 난민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주변 강대국들 간의 전략적 관계가 혼란에 빠짐으로써 국가이익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둘째, 통합된 한반도가 과거보다 더 큰 규모의 국가로 거듭남으로써 주변국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아니면 통합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적 정서가 고양되지만, 내적 혼란이 조성될 때 과거 독일처럼 외부에 대한 국수주의적, 배타적 민족주의로 비화됨으로써 예기치 않은 호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걱정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걱정을 불식시켜야 하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남한이 떠안아야 할 과제이다. 동북아는 주지하듯이 불편한 과거의 역사에 대한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는 지역이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 모두 우리처럼 오래 전부터 단일 민족 국가가 영토 내에서 구축된 나라들이어서 역사 속에 침윤되어 있는 민족주의적 정서가 강한 나라들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도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우리와 중국은 고구려사 등 동북공정 문제, 우리와 일본은 독도 문제,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열도 문제 등 영토 문제나 역사

문제 등 민감한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다. 따라서 현안만으로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지역이다. 더구나 북한 핵문제로 인해 미국까지 포함하여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한반도에 갖는 또 하나의 발화적인 관심사가 개재해 있다. 남한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거나, 해결하려고 자임하는 것은 능력을 벗어난 일임에 틀림없다. 다만 남한은, 남한이 향후 한반도 민족주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각국의 선린을 추구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그것은, 물론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동북아 각국과의 평화로운 교류와 협력, 공존, 그리고 동북아에서 비지배 선린의 원칙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IV. 결 론

이 글은 한반도 민족주의라는 개념으로 남북한의 민족주의가 갖는 특징을 살펴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민족주의로 탈바꿈해야 하는가를 목표로 하였다. 한반도 민족주의는 저항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등장했고, 지금까지 남북한 모두에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한반도 민족주의는 민족적 정서에 호소하여 내적으로는 단결을, 외적으로는 적대의식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배타적·국수주의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성격은 분단체제 하에서 남북한간에도 작용하게 됨으로써 민족주의 자체가 소통합적·분열적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족통합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사고하도록 만들 정도로 강력하게 작용했으며,

주변국들과의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로는 남북한 모두 민족주의 담론이 자체 내의 권위주의적인 독재 정치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민족주의의 전개와 더불어 우리 민족이 근대로 진입하면서 획득했어야 할 민주주의가 남북 모두에서 저발전되었던 것이다. 남한의 민주화는 그런 의미에서 소중한 민족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셋째 남북한은 각각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이야말로 유일한 민족사적 정통성을 갖는 존재임을 과시하게 되었다. 이는 민족통합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장애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퇴영적인 한반도 민족주의의 현상적 특징이나 유산을 극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민족주의의 내재적 특성인 통합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에 면면히 흘러내려온 강력한 민족의식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민족주의의 역사에서 실제로 나타났던 과정을 오늘에 구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를 중심으로 한 보편적인 이념, 즉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민족주의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이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민족주의 프로젝트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한반도 민족주의 프로젝트는 미완의 민족적 과제인 민족국가의 건설이며, 이 민족국가의 건설을 위한 한반도 민족주의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남한이 주도적으로 해내야 하는 이유는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한 경험을 통해 한반도 민족주의 프로젝트가 역사적으로 실천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핵심은 남북한 간의 공존과 통합, 민주주의의 실현, 동북아에서의 평화를 위한 선린 민족주의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남한의 발전 궤적을 따라 실천에 옮겨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갈 길은 아직 멀다. 핵문제와 완고한 정치체제, 피폐한 경제상황, 고립화된 대외관계 등 북한이 제공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도 있지만, 남한 역시 민주주의 공고화의 미완성, 경제발전 동력의 약화, 고립화의 경향, 무원칙한 대북 정책, 국제사회와의 협력 연계 부족 등이 노정되고 있다. 동북아 각국 관계 또한 한반도 민족주의 프로젝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오래 전부터 추구해 왔던 통합, 독립, 민주주의의 요소에 기초해서 민족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을 투사한다면 한반도에서의 민족통합과 민족국가의 수립,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로 등장할 것이다. 민족 내부의 민주주의와 민족 외부의 선린이 결합했을 때 한반도 민족주의는 새로운, 그러나 강력한 통합의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혁범,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서울: 숲, 2000).
- 기어리, 패트릭, 『민족의 신화, 그 위험한 유산』(서울: 지식의풍경, 2004).
- 김국후, 박길용, 『김일성 외교비사』(서울: 중앙일보사, 1994).
- 김정훈, “분단 체제와 민족주의-남북한 지배 담론의 민족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동질이형성,” 『동향과 전망』, 44호(2000년 봄).
- 김창근, “북한 지도부의 민족·민족주의 담론,” 『북한연구학회보』, 7권 2호(2003).
- 김현환, 『김정일장군 조국관』(평양: 평양출판사, 2001).
- 김형아,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유신과 중화학공업』(서울: 일조각, 2005).

- 남원진, “남/북한의 민족, 민족주의, 민족문화론 연구,” 『통일정책연구』, 15권 1호.
- 단, 오토, 『독일 국민과 민족주의의 역사』(서울: 한울아카데미, 1996).
- 바이덴펠트, 베르너, 코르테, 칼-루돌프, “민족과 민족의식,” 『독일통일백서』(서울: 한겨레신문사, 1997).
- 박호성,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한반도 민족주의’ 를 위하여』(서울: 당대, 1997).
- 송국현, 『우리 민족끼리』(평양: 평양출판사, 2002).
- 송승환,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조국통일』(평양: 평양출판사, 2004).
- 스칼라피노, 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서울: 돌베개, 1986).
-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문 100답』(평양: 평양출판사, 2003).
- 암스트롱, 찰스, 『북조선 탄생』(파주: 서해문집, 2006).
- 와다, 하루키,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서울: 일조각, 2003).
- 윤성식, 『자주통일의 기치따라』(평양: 평양출판사, 2004).
-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서울: 일조각, 2006).
- 이정식, 김학준, 김용호, 『혁명가들의 항일 회상』(서울: 민음사, 2005).
-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서울: 소나무, 1999).
- 장 석, 『김정일장군 조국통일론 연구』(평양: 평양출판사, 2002).
- 전미영, “통일담론에 나타난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통일이념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43집 1호(2003).
- 전재호,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 연구: ‘역사의 이용’ 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18권 1호(2002).
- 정영철,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그 특징: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4권 2호(2001).
- 최기환, 『민족과 선군정치』(평양: 평양출판사, 2003).
- 최장집, “동아시아 공동체의 이념적 기초: 공존과 평화를 위한 공동의 의미지평,” 『아세아 연구』, 47권 4호(2004).
- _____,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서울:

- 후마니타스, 2005).
- _____,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서울: 나남출판, 1996).
- 커밍스, 브루스, 『한국전쟁의 기원, 하』(서울: 청사, 1986)
- 포포프, 알렉산더, “북한의 경제침체와 대외경제관계: 1970년대 후반~1990년대,” 『북한사회주의 경제의 침체와 대응』(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5).
- 하버마스, 『현대성의 새로운 지평: 하버마스 한국방문 7강의』(서울: 나남출판, 1996).
- 헨더슨, 그레고리, 『소용돌이의 한국정치』(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 휴지스, 마이클, 『독일 민족주의 1800-1945』(서울: 명경, 1995).

-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 ed. (London: Verso, 1983).
- Ekiert, Grzegorz, *The State against Society: Political Curses and Their Aftermath in East Central Europ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 Hong, Yong-Pyo, *State Security and Regime Security: President Syngman Rhee and the Insecurity Dilemma in South Korea 1953-60* (Oxford: St Antony's College, 2000).
- Lankov, Andrei, *Crisis in North Korea: The Failure of De-Stalinization, 1956*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
- Linz, Juan, and Stepan, Alfred,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